사상 초유의 일…남북대화 더 어려워질 듯

■ 국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장

북 강력 비난 예고…남북관계 후퇴 가능성

외교적 관례 무시…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 국회 정보위원 일부에 전달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남북간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처럼 공개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파장을 불러올지 아직 정확히 점칠 수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존엄'으로 받들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의 비공개 회담 석상에서의 발언이 공개된 것 자체를 두고 남측을 강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김 전 위원장이 남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공개가 된다면 김정일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의 최고존엄인 김정일 어록이 다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번 공개가 앞으로의 남북 당국간 회담과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을 감안한다면 남북대화 재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남북간에 앞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데 한계가 설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북한도 그동안 정상회담 이외의 남북회담 내용의 경우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일방적으로 회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 수 있고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에 상당한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회의록 공개가 가져올 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자외교의 핵심인 다른 나라와의 정상외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 정상간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은 외교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정상간의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드문 일인데다가 설사 공개하더라도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수십 년의 기간을 두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4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부정한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시민사회·정치권도

국정원 규탄…國調 촉구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한 대선·정치 개입을 놓고 전국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광주·전남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지역 종교·교육단체 등은 24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부정한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무단 개입하고 서울경찰청은 거짓수사로 무마시켰으며, 새누리당 역시 이를 악용해 국민의 표심까지 왜곡시킨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문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물타기를 멈추고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 시민사회는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해 오는 26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28일께 전국 동시 촛불집회를 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진보연대도 25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가정보원 해체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2013 민주주의 수호 전남지역 각계각층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합진보, 대규모 정책 당대회

29~30일 당원 등 5000여명 DJ센터서

통합진보당이 내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대규모 정책 당대회를 열고 세 확산에 나선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오는 29~30일 양일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00여명의 당원 및 시민이 참여하는 '2013 정책 당대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책 당대회는 통합진보당의 노선과 전략, 핵심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하는 참여형 행사로, 2년마다 개최되는 전국 행사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대회를 당원 중심의 행사가 아닌 각종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정책박람회로 치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길거리 공연·어린이 벼룩시장·책 교환 장터·먹거리 장터·홍보 부스와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또한, 지방자치와 자주 통일, 보건의료, 법률, 노동, 농민, 학생, 청년, 여성, 장애인, 환경 등 주제별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날인 30일에는 대의원대회와 광주진보연대 주최로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시민 정치 한마당'도 열린다.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에서 선명한 진보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내외 선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광주대회를 통해 광주를 진보정치의 발원지로, 당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광주에서 열리는 정책 당 대회에서 향후 10년간 추진할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국정원 국조' 박대통령 결단 압박

김한길, 청와대에 이행 촉구 서한…주말 장외투쟁 전개

박대통령 "의혹 밝힐 필요 있지만 국회가 논의 할 일"

민주당은 24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오는 26일부터 국정조사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하는 데 이어 주말에는 대규모 옥외집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도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한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직접 낭독했다.

그는 서한에서 새누리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NLL(북방한계선) 발언록 공개 공세'를 '색깔론을 통한 국론 분열 획책'으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이 국조 즉각 실시 수용을 오는 27일 중국 방문 전에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서한에서 "대선 불복이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민주당은 기어코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국은 '견월망지'(見月望指·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의 형국"이라면서 "국정원 국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실시돼야 한다.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장외투쟁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오는 26일 낮 12시 여의도역에서 '국정조사 이행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도당 차원에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이번 주말인 29, 30일에 수도권·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의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민주당이 국회를 떠나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2009년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4년여만이다. 그동안에는 외부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민주당도 함께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지하 수영장 3.3㎡ 당 80만원
볼링장, 골프장 3.3㎡ 당 15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